

'운항시각' 배분에 항공사 참여 못한다

국토부 직접 관여... 운수권 배분 기준에 '공정한 시장구조 확립 기여도' 신설

앞으로 슬롯배분에 민간 항공사들이 빠지고 정부가 관여하게 된다.

슬롯은 특정 항공편이 운항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시간대를 뜻한다. 인천·김포·김해·제주공항 등 운항편이 많은 공항은 취항이전 슬롯확보가 필요하다. 최근 국내 주요 국제공항마다 슬롯(SLOT·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횟수) 용량을 늘려야 하는데, 인천·제주·김해공항 등 상당수 공항에서 슬롯이 부족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경쟁심화 등 시장여건 변화에 맞게 진입 기준 등을 현실화하는 한편, 경쟁 환경을 공정하게 개선해 항공 산업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7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슬롯 배분 주체

를 기존 서울지방항공청과 공항공사·항공사 일부 과연조직에서 국토부와 공항공사로 변경한다. 배분 업무에서 항공사를 배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정부가 서울지방항공청에 슬롯 배분 업무를 위탁을 하고, 관리·감독만 하던 것을 앞으로는 직접 배분에 관여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운수권 배분 평가기준에 공정한 시장구조 확립 기여도를 신설한다. 항공사 간 불공정하게 슬롯을 교환하거나, 단독 운항 노선에서 과도하게 운임을 설정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불이익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 2008년 저비용항공사 진입 촉진을 위해 완화된 면허 기준을 강화한다.

항공사업법령상 현행 면허요건은 자본금 150억원, 항공기 3대, 재무능력, 안전, 이용자편의, 사업자간 과당경쟁 우려가 없을 것, 결격사유(외국인 지배금지 등) 배제 등이다.

등록 자본금은 150억원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신규 항공사가 진입해도 조기 부실화가 우려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통상 항공사 신규 설립시 면허획득, 운항증명(AOC), 운항착수 등 초기단계에서만 300억원 이상이 소진된다.

항공기 요건은 3대에서 5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항공기 수가 증가할수록 기재운용 효율화 등 비용절감, 운항정시성 확보, 네트워크 구축 등 규모에 경제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경쟁력 있는 업체가 시장에 진입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업체간 조종사 영입경쟁, 승무원 과로 등 항공인력의 경제 관련 사회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며 "인력확보계획 적정성을 면허 기준으로 명문화하고 보다 면밀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항공사 관리도 강화한다. 부실 항공사는 실제 퇴출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 안전투자 소홀 등

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안전사고 가능성 등을 최소화한다. 서비스 품질 제고 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현재는 2분의 1 이상 자본잠식이 3년 이상 지속돼야 재무구조 개선명령이 가능하다. 그러나 발동 시기를 2년 단축해 실효성을 강화한다. 개선명령을 받은 후에도 2분의 1 이상 자본잠식이 3년 이상 지속되면 면허 취소가 가능하며, 추후 면허취소 시기 단축도 검토할 예정이다.

운수권 배분 평가기준에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를 반영해 정시운항유도, 소비자 보호조치 강화 등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유도한다. 또한 국가간 교류협력 및 사회적 기여, 사회적 책임이행 노력 등이 우수한 항공사는 운수권 배분 평가시 좋은 점수를 받도록 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2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http://www.mo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뉴시스



다거오는 화이트데이 화이트데이를 이틀 앞둔 12일 오후 한 편의점에 연인에게 선물을 다양한 사람이 진열돼 있다.

“美 관세 주시 중... 이전 계획 검토중”

중소·중견 철강업계, 향후 판도 촉각

지난 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철강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명령에 서명한 이후 국내 중소·중견 철강업계에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할 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향후 판도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중소·중견 업체들은 포스코, 현대제철과 같은 대형 철강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편이기 때문이다.

12일 업계 관계자는 "(분위기가) 안 좋다. 호주도 빠진다고 그러고"라면서 "일단 결과가 나온 게 아니니까 잘 지켜서 빠질 수도 있는거니까 구체적인 대응방안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호주는 미국에 군사·무력 측면에서 공평하고 호혜적인 관계를 형성할 것을 약속하고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어 "미국 일부 설비에 대해서, (그리고) 미국 이전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정부에서도 발효되기 전까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냈으니 기다리고 예의주시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업체도 미국으로의 생산설비 이

동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몇년 전) 미국 쪽에 현지 생산 법인은 확보해 두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도를 높일지에 대한 부분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수입산 철강(25%)·알루미늄(10%) 관세안을 예정대로 발효할 경우 중소·중견 철강업체들은 타격을 수밖에 없다. 대형 철강사들보다 대미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포스코의 경우 전체 매출에서 대미 수출 비중이 2~3% 정도에 불과하다.

현대제철과 동국제강도 3~4% 수준이다.

반면 중견기업인 넥스틸의 경우 전체 수출액의 80% 정도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넥스틸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지난해 4월 이후 20%대의 관세를 내 왔다. 하지만 현재 미국의 입장에서 관세 정책이 추진될 경우 51% 정도의 관세를 부과받는다.

지난해 대미 매출 비중을 25~30%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A업체의 경우도 미국 입장에 변화가 없으면 현행 6%대보다 5배 이상 높은 30%가 조금 넘는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사안이 워낙 예민하다 보니 조심스럽다"면서 "제재안이 확정이 돼야 구체적인 입장을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방통전파진흥원 직원 채용 모집

신입직 42명 · 경력직 12명 25일까지 선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갈 직원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채용규모 및 분야는 신입직 42명(무선국검사와 전자파 측정, 미디어 정책 개발 및 사업기획, 사무관리)과 경력직 12명(경영관리 및 정책분야) 등 총 54명을 25일까지 선발한다.

KCA는 2015년부터 NCS 기반의 직무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고 있으며 블라인드 채용방식을 시행하고 있다. /뉴시스

관세청, 군산·통영 소재 피해기업 '특별세정지원'

관세청은 정부의 '지역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원대책'의 후속 조치로 전북 군산과 경남 통영지역 수출입업자를 대상으로 납기연장 등 관계분야 특별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관세청의 특별세정지원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있는 해당지역 수출입 기업들은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담보없이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받거나 분할 납부혜택을 받게 된다.

또 2018년도 관세조사 대상인 경우에는 피해구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관세조사가 연기되며 이미 조사중인 업체가 희망하는 경우에도 관세조사가 미뤄진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해당 기업이 환급신청하는 경우에는 서류 제출없이 처리해 주고 신청 당일 환급금을 결정해 지급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관련기업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통관을 허용해 주고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미뤄 줄 뿐만 아니라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사실을 통보하는 것도 보류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관계자는 "군산 및 통영 소재 위기산업 피해기업 대상 특별세정지원을 마련했다"며 "특별지원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뉴시스

정부가 뿌리산업 고부가가치화와 일자리 생태계 조성을 위해 올해 668억 원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뿌리산업발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뿌리산업 진흥 실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실행계획은 2017년 11월 발표한 '제2차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

뿌리산업 고부가가치·일자리 생태계 조성 668억원 지원

(2018~2022)에 따라 수립한 1차년도 추진계획이다.

올해 실행계획에서는 뿌리산업의 성장정책, 기회하는 작업환경, 인력부족이라는 현안 해결을 목표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핵심기술의 기업 유입 촉진을 위해 뿌리기술 전문가가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대상으로만 산업부 첨단뿌리기술 연구개발(R&D) 지원하기로 했다.

뿌리기업 공정기술개발에 87억원, 구매 조건부 신제품 개발에 30억원,

전주매일 www.jjmaeil.com

전주매일 교통캠페인

과속,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